

전남광주특별시, AI집적·도시실증·등시·반도체 대도약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판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와 초광역 산업 전략이 공개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시장 강기정)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은 27일 첨단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창업동 4층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강기정 시장과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비롯해 이찬희 전남창업기술지주 대표, 이범식 한국에너지공과대학원 교수,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 지역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었다. 법안은 지난 1월30일 발의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재정 특례를 확대해 자치권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AI)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AI)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제도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조항에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제243조) ▲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 조성 특례(제242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특례(제244조·제246조) ▲AX 실증밸리 조성(제245조) ▲AI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5조)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 육성(제247조) ▲AI 기반 도시·행정 지능화(제



광주시·AI사업단, AI·반도체 산업 비전 설명회 개최 통합특별법 특례 공유... 초광역 첨단산업 전략 공개 강기정 시장 "통합은 AI·반도체 강국·산업융합 계기"

248조·제249조) ▲AI 기반 삶의 질 향상 및 약자 보호(제323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제250조·제251조) 등이 담겼다.

AI 인프라 확충에서 산업 집적, 도시 실증, 시민 체감, 반도체 산업 육성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구조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를 3대 축으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광주권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인재 역량, 전남 서부권의 전력·용수 자원, 동부권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초광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통합특별법은 흩어진 강점을 하나로 묶는 법이다"면서 "그동안 광주는 AI 인프라

와 인재, 전남은 에너지와 산업단지 등 각자의 강점이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면서 "흩어진 강점을 연결해 함께 키우고, 초광역 전략으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또 "기업 유치, 도시 실증, 시민 체감까지 한번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법에 담았다"며 "기업이 들어오기 쉬워지고, 도시에서 AI를 실제로 적용하며, 시민이 AI를 배우고 체감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행사는 광주·전남 통합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산업 비전 발표와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 전력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전

락 등 현실적 과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기술지주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초광역 통합 체계 아래 산업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경우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AI 실증 환경 확대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지정, 전남 동부권과 광주를 잇는 AX 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지도는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그릴 수 있다"며 "통합을 계기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머무는 '인 통합특별시', '인 광주'의 꿈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책 비전을 공유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 수립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산업 육성 본격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 통합 준비체계 가동

전라남도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준비체계에 돌입했다.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의 길이 열리며, 전남과 광주는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28일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한 이후 불과 5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도민의 뜨거운 열원이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로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 통합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달부터는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

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집중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3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권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특별시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실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중소기업에 구조고도화자금 300억 지원

매출 10%이상 감소 기업 금리 0.5%p 추가 인하...8개 은행서 실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환율·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금리 2.12% 상한을 적용한 300억원 규모의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관련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시설자금 10억원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우대기업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광주시는 연 금리 2.12%를 상한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시설투자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전자금은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이 종료된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신청은 4일부터 상반기 배정 금액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의 8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전남도, 2026년 장애인 일자리 4천132명 역대 최다

377억 투입... 안정적 소득기반·직무경험으로 자립역량 강화

충형 공공일자리 100% 지방비로 운영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장애인일자리에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간 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로 운영하며, 지역 74개 제공기관에서 2천9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이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보조하거나 복지시설·특수학교 환경정비와 급식 지원, 장애인 주차구역 제도, 경로당·복

지관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원 입소자 식·이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다.

특히 개인별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배치로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무·안전교육을 병행해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취업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복지형 일자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특성과 수행 가능 수준을 반영한 신규 맞춤형 11개 직무(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증진)를 도입했다. 단순

보조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능 수준과 선호를 반영한 직무 배치를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82명으로 시작해 올해 130명까지 확대했으며, 이 사업은 심한 장애로 민간 노동시장이나 기존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근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익옹호(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문화체험(미술·음악·연극 등) ▲인식개선(강의·공연 등) 등 3개 유형 직무를 지원한다. /신종팔 기자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4천132명을 선발·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보다 396명이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377억 원이 투입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장애인일자리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는 국비를 지원받고,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및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